

IMF 시대와 대학

권 기 흥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은 나라가 IMF 쇼크상태에서 정신없이 술렁이고 있다. 혼비백산·망연자실하던 초기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고, “다시 일어서자 -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쪽으로 차츰 가닥을 잡아 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을 해내야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다. 근검·절약하고, 금모으기 운동도 전개하며,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재벌 전문화를 강력히 유도하며, 자본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극대화하고... 등등. 모두 옳은 처방들이다. 당면한 외환·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들이다.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만 극복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인류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대전환의 과도기에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면서 외환위기의 형태로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다. 이 과도기에 우리의 체질을 대전환 후의 새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또 닥칠 수 있다. 우리가 왜 약한 고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

인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 또는 문화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의 체질 개선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없다. 다만 그것은 탈산업사회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보화사회·지식사회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회일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물적 자본의 대량 소유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새 시대 국제경쟁의 요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도기에 우리가 약한 고리로 입증되고 만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물량 위주의 낡은 사고와 전통적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자족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IMF 시대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떠안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대학은 이제부터라도 인적 자본의 생산기지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우리 대학의 위기와도 같다. 당면한 외환위기는 대학의 능동적 참여 없이도 일단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일시적 봉합은 모르되, 궁극적인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시대는 대학도, 아니 대학이야말로 진정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인적 자본의 경쟁력은 곧 '대학산업'의 경쟁력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개혁, '대학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IMF 시대를 제

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새 시대 준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IMF 시대의 성격

1) 세계적 무한경쟁의 시대

우선 당면한 외환·금융 위기의 성격부터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검토해 보자.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만한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분수를 몰랐던 셈이다. 빛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벌어서 값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문제는 버는 능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데 있다. '60~'70년대에 많은 빛을 내어 잘 벌어들였는데, 이제 와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의 근저에 깔려 있는 소박한 정서가 그러하듯이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가?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의 상당 부분이 리더십 부재에 기인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60~'70년대 한국 경제의 버는 능력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그때는 물량 경쟁의 시대였다. 물적 자본의 양이 주도하는 시대였다. 인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사치로 치부될 수 있는 시대였다. 인간은 그저 물적 자본의 부속품 정도에 불과한 기능을 수행하던 시대였다. 외채 조달 능력이 곧 버는 능력과 동의어일 수 있는 시대였다. 그때는 잘 통제된 비숙련 단순공의 시대였고, 기껏해야 간단한 영어 몇 마디를 구사할 수 있는 세

일즈만의 시대였다. 그때는 우리의 교육시스템도 제법 순기능을 감당해 내던 시대였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 공급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비숙련 단순공들 중에도 고졸자가 수두룩했고, 적어도 통제수칙을 주지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문맹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세 일즈만은 하나같이 대졸자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급하면 손가락까지 동원해 가면서 수출단가 흥정을 무리없이 소화해 내던 수출역군들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90년대 한국 경제의 버는 능력은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량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양보다 질이 문제되는 시대로 변모한 지 이미 오래다. 단순 모방품의 대량 복제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버는 능력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고품질화 경쟁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대는 시대다. 숙련 기능공과 기술자, 그리고 전문 지식과 식견으로 철저히 무장된 창의적인 고급 두뇌의 경쟁 시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물적 자본의 수량적 경쟁이 인적 자본의 기능적 유연성 경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 무한경쟁의 내용이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의 낡은 교육시스템이 더 이상 자신의 기능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뒤뚱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대학이 그러하다. 이런 까닭에 한국 경제의 위기는 넓게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좁게는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다.

빛은 내다 썼는데 벌어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버는 능력을 초과하는

빛을 갚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있는 것 팔아서 갚는 방법이다. 우리 기업들을 내다 파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름아닌 외국인 직접 투자인 셈이다. 물론 국경이 없어진 세계적 무한경쟁의 시대에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은 없다. 오히려 그들의 앞선 경영기법 등이 도입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자본의 성격이 석연치 않다는 데 있다. 소위 핫머니(hot money)라고 하는 투기 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을 소유한 이들 투기 자본이 단기 이익을 좇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외환·금융 위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생산 체제로는 더 이상 버는 능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도 그러하지만,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완전 개방된 우리 경제가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 휘둘리고 또 다시 위기를 맞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원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방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나라에서만 순기능을 하기 마련이다. 기술 종속성의 정도가 높은 나라에서의 개방은 자본 종속을 야기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전후 서독이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마르크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시장에서 차지했던 'made in Germany'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방의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인적 자본 육성 체제의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흔히 지적되는 소위 '고비용-저효율론'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통해 위기 탈출이나 위기 재발의 방지를 시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망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는 항상적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인적 자본의 육성·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유효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2) 문명사적 전환의 과도기

국제적 투기 자본의 장난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전환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물론 탈산업사회의 기술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기술과 같을 수 없다. 이미 미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제 바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겪어야 했던 비중 감축의 역사를 탈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이 겪고 있는 중이다. 문명사적 전환이란 산업구조상으로 보면 기존의 제조업 대신 금융산업·정보산업·지식산업 등의 서비스산업 부문이 주도적 부문으로 팽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제조업 비중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기술경쟁력 확보의 이중적 성격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산업 부문으로의 이행을 위한 신기술·신기법 및 새로운 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써 새로운 기술경쟁력의 기반

을 축적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 부문에서의 기술경쟁력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 다행히도 양쪽 다 경쟁력의 주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적 자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기술경쟁력은 숙련된 다기능 유연 기능공 및 기술자, 그리고 새로이 발흥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과를 생산 및 판매 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인력과 경영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새 시대 서비스 부문의 기술경쟁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적 자본 그 자체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대부분은 대학의 변신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힘도, 대전환 이후의 새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대학의 개혁,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혹자는 우리의 장래를 제2의 홍콩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제조업을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고 전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로 개편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홍콩 경제와 같아질 수는 없다. 우선 규모 자체가 다르다. 동일한 반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7,000만 인구를 부양하는 대규모 경제 단위이다. 게다가 우리에게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가 서비스 위주로 산업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이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데는 일정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 과거에 농업이 경험했던 바와 같은 수준으로의 축소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탈산업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고 아직도 상당히 긴 과도기를 요구할 것이며 언젠가 과도기가 끝나더라도 제조업의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나의 양자 택일이 아니다. 둘 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문들이다.

3. 대학의 역할

1) 대학의 3대 기능

이제 이러한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의 생산 기능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주력 부문인 제조업에서의 기술전문인력 양성도 대학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산력의 본질적 변화는 기존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수평적 분업체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유연 전문생산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수평적 분업체계 아래의 유연 전문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 전문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생산현장이 필요로 하는 이들 인력을 일차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당연히 대학의 몫이다. 기술전문인력의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속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기술 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해 이들 인력의 계속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곳도 역시 대학이다. 말하자면 대학은 산업에 대해 양질의 기술전문인력이라는 인적 자본을 공급하는 공급처이자 동시에 사

후관리(A/S) 기관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 생산현장의 기술전문인력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할 고급 두뇌들의 창의성은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이들의 초기 양성과 계속적인 연구기회의 제공 또한 대학이 맡아야 할 과제이다. 새로이 부상하는 다양한 서비스 부문을 주도할 인적 자본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못지 않게 고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의 높은 유동성에 의존하는 소위 '유동성 전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이들 서비스 인력도 대학이 양성해야 하고, 대학이 사후 관리를 맡아야 한다.

둘째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지식사회에 대비한 일반교육의 강화에 있다. 탈산업사회는 산업사회의 시민상과는 다른 시민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사후 적응하는 소극적 시민상을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새 시대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적극적 시민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적 자본의 경쟁 시대인 새 시대의 주도권은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의 대중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 바탕 위에 이들 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 체제를 갖춘 나라에 의해 행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새 시대는 총체적 경쟁, 모두의 경쟁이라는 의미에서 대중적 문화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대학이 문화경쟁의 주체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은 이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여전히 지성의 산실이

어야 한다. 시대정신의 본산으로서 대학은 사회의 한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사회가 혼탁해지고 천박해지는 경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을 때, 대학은 비로소 진정한 대학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권위의 확보는 앞서 지적한 대학의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만 충실하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 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제시하는 개척자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더욱 간절히 요망되는 대학의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다.

2) '대학산업'의 시대

위에 제시한 대학의 3대 기능을 개별 대학이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교육이 이미 대중교육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 기능은 한국 대학 전체가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일 뿐이다. 대학의 분업시대인 셈이다. 어떤 대학은 추상 수준을 아주 높은 가운데 이론과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특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학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기술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유연 전문인력을 주로 양성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 교육에 특화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대학이 등장하는 것도 바람직하

다.

대학도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어야 한다. 대학도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영단위임에 틀림없다. 모든 경영단위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자체의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우리가 IMF 시대를 맞고 있는 것도 우리의 금융산업이 자체의 효율성을 등한히 한 채 다른 산업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다 보니 생긴 결과이다. 금융산업도 이제 제대로 된 금융 '산업'이 되어야 하듯이 대학도 이제 '대학산업'이 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이나 재벌기업만이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니다. 대학산업도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대학들이 앞서 지적한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산업은 인적 자본인 인력이라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들 상품의 수요자는 기업을 위시한 사회 전반이다. 수요된 이들 상품들이 발휘하는 생산성에 따라 대학산업의 부가가치는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간접성에 대학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원인이 있다. 이것이 또한 이때까지 대학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채 안주해 온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IMF 위기는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학의 변신이 위기 극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대학의 변신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일차적 과제는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살빼기이다. 방만한

조직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직원조직의 방만함도 그러하지만, 교수직제의 문제도 차체에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대학산업이 야말로 인적 자본의 경쟁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대학산업에서이겠는가? 대학에서의 군살빼기는 단순한 인원 감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에 비유한다면, 노동시장의 양적 유연성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능적 유연성 확보의 문제인 셈이다.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능력 개발과 발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교수는 결국 아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는 것이 이미 무의미해진 상태에서도 새로이 아는 것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다른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교수의 지식이 부단히 새로와질 수 있는 경쟁체제의 확립이 군살빼기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은 연구실이나 실험실의 고독한 작업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대학과 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학과의 벽을 허물고 인접 학문간의 제도적 통합을 추구하는 학부제의 도입도 낡은 틀 속에 안주하던 교수사회에 역동적 경쟁의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식 대학을 탈피하고 특성화된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대학 내부적 경쟁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내부적 경쟁체제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대학 차원의 특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각 대학들은 자신이 가진 인적 자

본의 경쟁력이 앞서는 쪽으로 특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성화의 방향과 심도를 둘러싼 대학간의 경쟁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 평면적인 잣대를 일률적으로 들이대는 기존의 대학평가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시장적 경쟁원리에 입각한 결과적인 대학간 비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 모든 학과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수능 시험 위주의 현 입시제도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맺는 말

IMF 위기의 본질은 인적 자본 경쟁력의 위기로, 따라서 대학의 위기다. 위기의 본질적 극복은 대학의 변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학 변신의 핵심은 군살빼기 구조조정과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에 있다. 이상이 이 글의 요지다. 그렇다. 대학이 사회 변화의 방향을 앞서 읽지 못하고 뒤처져 뒤뚱거린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대학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들은 몸집만 비대해진 어린애마냥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더 이상 대학 개혁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 대학인들이 앞장서 위기의 극복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홀로 당면한 위기의 극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위기의 본질적 성격상 대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단기적 위기 극복도 일시적 상황의 호전을 의미할 뿐 장

기적으로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말일 뿐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나서서 위기 극복을 위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분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모든 대학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의 결실이 다시 그 빛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쇄신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권기홍/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획처장과 한독 상경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대구사회연구소 이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산업민주화와 노동자 참여: 그 이론과 실제" 외 다수를 발표했다.

대학 교육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0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밖에서 본 대학
(12장 안팎의 대학 외부인사 수상)

■ 참고사항

-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목차 등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편집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